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8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12

발 의 자 : 서영교 · 한병도 · 오영환
김민철 · 신정훈 · 김승원
강민정 · 양정숙 · 이성만
민홍철 · 이원욱 · 송옥주
임호선 · 윤관석 · 김남국
이형석 · 최승재 · 김영배
박성준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
에 따르며,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
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고,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
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
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, 급여
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
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의무
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

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급여의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유족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한)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(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

여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1조의2(유족에 대한 급여의</u> <u>지급 제한) ① 제11조에도 불</u> <u>구하고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</u> <u>사람에 대하여 부양·양육의무</u> <u>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</u> <u>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</u> <u>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</u> <u>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</u> <u>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감액</u> <u>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